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7월 1일 금요일 (음 5월 27일) 제 15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사회보장사업 약자 배려 미흡

56개사업 52억 삭감

일자리사업 폐지·축소
대부분 노인 관련 예산

“현 정부 복지 역행에
전북도도 동참” 비판 일어

전북도의 사회보장 정비 사업이 노인 등 도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이어져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 침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도내에서 삭감된 정비대상 사업 대부분이 노인 관련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발표한 2016년 전북도 및 14개 시·군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총 52억여 원의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

지난해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추진에 따라 정비된 전북도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이 크게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당시 도는 예산 기준 총 91개 사업 453억1,200만 원이 유사중복 사업으로 정비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후 도내 시민사회의 반발로 2016년 현재 도는 총 56개 사업 5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폐지 또는 예산 삭감 사업들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노인’과 ‘저소득’, ‘보육아동’, ‘청소년’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지원 사업 폐지 또는 예산 축소 사업으로 ‘노



전주오픈 국제태권도 일정 발표

강영수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전북도의회 의원)과 신재룡 전주시태권도협회장 등 대회 관계자들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관련기사 4면)

인일자리사업’이 꼽혔다.

각 시군 노인일자리 사업 중 장수군이 가장 많은 17억2,600만원이 잘려 나가면서 도내에서 정비한 즉시폐지사업 가운데 단일사업 삭감 규모(전북 전체 예산중 35.1% 삭감)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4억3,700만원, 순창 2억 1,100만원 등의 순이다.

또한 완주군 장수수당은 2억2,200만원, 김제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2억원, 정읍시 경로우대지원 1억3,300만원은 폐지·삭감됨에 따라 노인빈곤 심화 등 사회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

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 지원사업 폐지 또는 예산 축소된 사업에는 저소득장학금지원(3억 2,000만원), 저소득층 수급자의료비, 건강보험료 지원(1억2,000여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1억2,000만원), 저소득층진급집수리 사업(4,200만원) 등이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3만여 명 등 초고령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등은 축소가 아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무상급식 할 것 없이 ‘복지’와 관련해서 역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북도도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관계자는 “복지를 통한 사회 안정감 확보와 복지제도 확충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라면서 “민선6기 하반기에는 도내 각 지자체가 정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언론인의 자격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 대상이 맞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 판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개인자격으로 하는것까지 막지 못해 언론매체 통한 활동 이미 다른 법률로 규율”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고관 규정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즉,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중,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언론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 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전정배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본안 사건의 재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선거운동까지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은 이미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이강오 국장

이래성 국장

이강오 도 차행정국장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 승진

전북도가 지난달 30일 오후 하남기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강오 차행정국장장과 이래성 공무원교육원장이 3급(국장급) 직급 승진했다. (인사 명단 14면)

도 국장급 승진인사 기준은 관리자로서 지도력과 통솔력, 업무수행 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인물로 임용된다. /정영수 기자

※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한국민속예술축제 10월 전주서

청소년민속예술제와 병행

하기 위해 지난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민속축제로, 지난 1995년부터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현재까지 400여 종이 넘는 민속 종목이 발굴됐으며, 140여 종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관련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운)는 이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북도, 전주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관계자들을 비롯한 전국 22개 시·도(이북5도 포함) 중 출전이 확정된 20개 시·도 관계자 및 연출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준비를 위한 전국 시·도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김영재 기자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기본 추진 계획 발표 ▲심사 및 참가규정 안내 ▲행사장 배치안내 ▲경연순서 추천 등을 진행하고, 각 시·도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난 1988년 대회 이후 28년만에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기접놀이를 비롯한 대한민국 대표 민속예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예술축제가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린다.
지난달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전주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열리는 것은 지난 1971년 대회와 1988년 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보존

